노동자 연대

ws.or.kr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제607호 | 202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값 1,000원

후원 계좌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여권의 첨예한 갈등 2면
한덕수 대법원 선고 2면
국힘의 긴축 압박 10면

스페인 총파업 5면

홍대역 젠더폭력 항의 6~7면

인하대 극우 반대 행동 7면

팔연사 초청 방한 강연 일란 파페 국역 책 소개 8면

트랜스젠더 권리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 11면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3면
근로복지공단 쟁의 9면



젠슨 황 추문 4, 12면

이주노동자들 저항하다

관련 기사 3면

사진 출처 금속노조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싸운다

관련 기사 9면



사진 출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이렇게 생각한다

최민희 발언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라

민주당 의원 최민희는 비공개 당원 모임에서 이재명이 과거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하셨다.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해보자,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

이재명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최민희는 "기억 착오"였다며 일단 물러섰다.

최민희가 속해 있는 친문계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흐지부지에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최민희가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한 것일까?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 미수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 민주당은 다른 5개 야당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탄핵안 발의 몇 시간 전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사퇴 촉구, 탄핵 추진을 동시에 요구했다. 최민희 본인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발언이 이 시점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것을 걱정한다

이재명이 "한덕수랑 손잡고 해보자"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12월 15일)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다.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

계엄 반대 못지않게 "국정 안정"을 중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인 한덕수 대행 체제를 한동안 인정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극도로 크다는 것을 깨닫자 비로소 12월 27일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비록 최종 폐기되긴 해도 한덕수 끌어안기 발상은 이재명식 "중도·보수 확장" 노선의 전조였다. "중도·보수 확장" 노선은 내란 청산을 최소화해 "국정의 연속성"과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지연되고 일부는 무죄·감형 판결을 받았다. 우파는 사법부 독립,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등을 부각해 헌정 질서 위반 프레임을 여권에 되돌리는 등 내란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최민희의 발언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김민석은 곧장 징계에 착수했다. 김민석은 윤리감찰단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 이첩을 지시했다. 최민희 발언의 진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면 "국민주권정부의 정당성"(친명계 최고위원 서미화)이 논란이 될까 봐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11월 19일 한덕수 대법원 선고

한덕수에게 다시 중형을 선고하도록 결정하라

대법원이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1월 19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다음주에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였다. 대중의 공분이 크게 일자 대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사태는 내란특검의 기소에 따른 내란죄 재판에 적용하기로 한 "6·3·3(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 내 판결하기) 방침"을 법원이 재판을 끌며 어겼기 때문이다.

한덕수 재판에서 6·3·3 방침을 준수한 것은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유일하다. 2심은 16일을 초과하고는 8년을 감형했다(5월 7일). 대법원은 8월 7일까지 선고가 내려졌어야 할 상고심 시한을 석 달이나 넘긴 것이다.


사진 출처 총리실

한덕수는 트럼프의 지지와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 자리까지 노렸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판사는 "12·3 내란"이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서 우익의 과격화를 부추겨 민주주의를 더욱 위험에 빠트렸다며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보다도 8년이나 높은 23년형을 선고했었다.

이 엄중한 판결은 당시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석방과 재판 지연으로 분노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국무총리로서 친위 군사 쿠데타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탄핵 반대에 앞장섰고, 국회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 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해 윤석열 헌재 탄핵을 방해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지와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후보로 차기 대통령까지 노렸었다.

이런 반민주 중범죄자가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준 것도 모자라 형 미확정 상태로 바깥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상황이 될 뻔한 것이다.

다행히 대중의 공분이 일자 조희대 대법원이 다급히 선고 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한덕수 석방 우려 건은 현재 내란 청산이 처한 상태를 보여 준다.

김문성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재계약 투쟁을 결의하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사진 임준형

"우리 중 한 명을 공격하는 건, 우리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외치는 이주노동자들

11월 12일 밤, 현대중공업에서 계약 해지가 예고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계약 해지에 맞서 투쟁을 결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은 올해 6월부터 사용자 측의 "나쁜 계약" 강요와 부당한 밥값 공제 등에 맞서 싸워 왔다. 성과도 있었다. 계약서 일부 조항을 개선했고 부당하게 공제당한 밥값을 반환받았다.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현중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 중 50명 가량이 11월 30일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이들 중 18명이 재계약 거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직접고용 계약직들이다. 재계약 대상 이주노동자 조합원 중 36퍼센트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인데,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맞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11월 3일 퇴근 후에 "나쁜 계약"에 맞서 최초로 집단행동을 한 장소에 다시 모였다.

노동자들은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다. "우리 중 한 명을 공격하는 건, 우리 전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고된 사람들을 지켜내야 노동조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노조 탄압 계약 만료 상황에 맞서 전 조합원이 모여 단결된 투쟁을 결의합시다."

12일 투쟁 결의 영상을 보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노동자는 이렇게 발언했다. "회사가 우리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하청지회 대의원 차리타 씨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투쟁에 나선 것을 기뻐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 동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동지들에게도 이것은 큰 본보기가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우리 동지들을 쫓아냈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 해지되면 투쟁이] 멈출 것이라고 회사가 생각했다면, 회사는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동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투쟁!"

지원 요청

이주노동자들은 계약이 종료되면 비자가 종료된다. 국내에 체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취업비자로 변경하면 항의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결의대회는 매우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쟁을 결의한 이주노동자들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직고용 이주노동자 재계약 쟁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12월, 1월, 2월 앞으로 매달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노동자들이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다음에 처음 있는 집단 재계약 거부 쟁점에서 잘 투쟁하는 것이 이후 있을 재계약에서도 조합원을 지키고 나아가 이주노동자 모두의 고용을 지키는 길이다.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이 올해 단체협상 승리를 위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했을 때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이주노동자 조합원 수십여 명이 2차례나 지지방문을 했다. 그리고 지부장은 사용자 측과 잠정합의한 후 크레인에서 내려올 때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측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지부의 지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철회하도록 정규직 노조가 이주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며 연대 투쟁으로 사측에 대한 압력을 키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극우 성향 사이트의 글을 인용하며 이주민들을 공격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자국 송금을 문제 삼았다.

돈 많이 벌어 가족들 잘 부양하라며 머나먼 한국으로 데려와 놓고서는 온갖 차별 대우를 다 하더니 버는 돈 한국에서 다 쓰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노동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노동자들의 노동이 이윤의 원천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가 인건비로 간다.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통상 10~13퍼센트 정도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더 낮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하며 임금보다 훨씬 더 큰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지부의 지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연대 투쟁으로 사측에 대한 압력을 키워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망언을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배척에 동조하면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이주민 배척과 인종차별을 주장하며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는 극우가 성장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주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

현대중공업 조선업 불황기에 원·하청·이주노동자 모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조건 악화는 정주노동자들의 조건 하향 압력을 형성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계약 종료에 맞선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 연대하자!

젠슨 황의 퇴진이 초래한 위기들

지난 10월 29일 젠슨 황이 중국 첩자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과 혼외 관계를 맺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가 나온 지 14일 만에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때 시가총액 세계 1위였던 기업의 경영자가 이렇게 빨리 추락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앨리스 황이 정말 중국 첩자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젠슨 황은 이를 알고 있었는지, 트럼프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앨리스 황에 대한 첩보를 접하고도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젠슨 황이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자리에 복귀하려 한다는 뉴스도 나온다. 그의 거취를 두고 이전투구가 벌어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젠슨 황의 사임과 거취를 둘러싼 파장이 미국 AI 산업 전체와 미중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가 AI 산업의 개척자이자 중앙은행 구실을 해 왔기 때문이다.

젠슨 황은 AI 산업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매출액 폭증이나 시장 확대 등을 기초로 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그 산업을 이끌었다. 젠슨 황은 AI 산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오픈AI나 코어위브 등 수많은 AI 관련 기업들을 지원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네오클라우드 업체인 코어위브에 20억 달러(11퍼센트의 지분) 이상의 지분 투자를 했을 뿐 아니라 최대 63억 달러의 매출 안전망을 제공했다. 코어위브가 데이터센터를 짓고 사들인 엔비디아의 GPU 연산 용량을 팔지 못할 경우 엔비디아가 이를 매입해 주기로 계약한 금액이 63억 달러라는 의미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GPU를 판매하기 위해 그것을 매입하는 기업들에게 신용과 자금을 제공한 셈이다. 월가에서는 이런 순환 금융 거래를 우려하는데, 1990년대 말 닷컴 위기의 주역이었던 루슨트와 시스코를 닮았기 때문이다. 이 기업들은 신생 인터넷 기업들이 자사의 통신 장비를 살 돈이 없자 자금이나 대출 보증을 제공해 자사 장비를 대거 사들이게 했다.

엔비디아가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파트너사에게 제공한 지분 투자, 매출 보장(백스톱), 인프라 및 임대 관련 보증 등의 금액은 1,645억 달러(한화 230조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지적했듯이, 젠슨 황의 많은 거래는 계약서가 아닌 악수로 이뤄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젠슨 황은 아폴로, 블랙록 등 월가의 대형 사모펀드를 끌어들여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자금 지원을 추진했는데, 그가 사임하면서 일부 기관들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가 없다면 이 구상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젠슨 황의 퇴진이 경쟁사들(브로드컴이나 AMD)에 득이 될 수 있다거나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젠슨 황이 지금까지 AI 산업에서 했던 구실에 비춰 볼 때 그의 퇴진은 AI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금력이 취약한 AI 기업들이 파산하는 등 거품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사진 출처 백악관

젠슨 황의 엔비디아는 AI 거품을 일으키는 데서 중심적 구실을 해 왔다

이견

젠슨 황 사건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둘러싼 미국 지배계급 내 갈등을 보여 줬다. 한편에서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면 그 반도체가 중국의 첨단 무기와 AI 산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중국공산당에게 불필요한 기술적 우위를 건네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젠슨 황은 중국이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면 중국이 오히려 독자적인 대체 생태계를 구축하게 돼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견해였다.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암시장이나 제3국을 통한 밀수를 부추길 뿐이고 오히려 중국 시장을 놓친 미국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만 손실을 볼 것이라는 게 그의 논리였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런 이견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 실제로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하지 않았던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둘러싼 미국 지배계급의 이런 갈등을 근본적이고 중요한 대립으로 침소봉대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대립이 AI 산업과 더 넓게는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미국 금융시장이 젠슨 황 퇴진의 파장을 우려하던 중에 미 연준이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AI 열풍에 따른 자산 가격 고평가와 데이터센터 및 첨단 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쏠린 급격한 부채 증가를 가장 중요한 취약점으로 꼽았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AI 인프라에 6,800억 달러가 투자됐고, 이와 별도로 관련 부채와 지급 보증 등에 3조 달러가 넘게 투입됐다고 한다. 그 외에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리스크도 있다. 이런 투자와 채무가 '과도한' 것은 기대한 수익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 대비 수익, 즉 낮은 이윤율의 문제를 드러낸 셈이다.

젠슨 황의 퇴진을 계기로 AI 산업에 대한 지나친 열기가 식고 다시 신중한 투자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AI 산업의 속도가 늦춰지면 취약한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그다음 기업의 파산을 재촉할 수 있다. 젠슨 황의 퇴진이 AI 산업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정구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오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86가길 5 3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거대한 총파업 이후 스페인은 어디로?

바르셀로나에서 주디 콕스

루이비통 매장이 문을 닫았다. 베르사체 매장도, 그랜드호텔도, [유명 레스토랑 체인] 하드록 카페도 문을 닫았다.

하지만 11월 11일 저녁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리는 수십만 파업 노동자와 세입자 운동가들로 붐볐다.(관련 기사: 본지 606호 '총파업이 스페인을 휩쓸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카탈루냐어로 파업은 '바가'(Vaga)다. 현수막·깃발·팻말을 들고 조명탄과 폭죽을 터뜨리며 거리를 메운 시위대는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 "바가, 바가, 바가 헤네랄(파업, 파업, 총파업)!" "투티 소노 안티파시스티(우리는 모두 반파시스트다)!"

파업 교사 안나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교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일터에 나가지 않아야 우리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제야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죠.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어요. 산체스 총리가 책임자죠. 우리 임금이 쥐꼬리만한 것은 산체스 탓입니다. 그렇다고 우파에 투표할 수야 없죠. 우파인 국민당(PP)은 극우 정당 복스가 집권할 길을 터 줄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훨씬 나빠질 거예요."

파업에 참여한 버스 운전사 빈센트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 모였어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단결하면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드리드 시위는 바르셀로나 시위보다도 더 컸다. 폭우 속에서도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스페인 곳곳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 행진들이 스페인에서 2012년 이후 최초인 하루 총파업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총파업은 그저 조합원들이 거리에 나와 구호를 외친 뒤 집에 돌아가는 수동적 파업이 아니었다. 도로 봉쇄, 대중적 피케팅(대체 인력 저지), 경찰과의 충돌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사진 출처 UGT de Catalunya

"11월 11일! 총파업!" 주거 위기에 대한 투쟁이 양대 노총을 총파업으로 떠밀었다

스페인 투쟁을 촉발한 것은 주거 문제다. 지난 9월 마드리드에서 87세 여성 마리아 델 카르멘(일명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이 강제 퇴거당한 것이다. 강제 퇴거 후 마리카르멘은 몇 주 만에 숨졌다.

스페인 사회당(PSOE) 소속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주거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2023년 재집권했다. 산체스는 공공 주택 공급, 월세 규제, 임대인 횡포 규제를 약속했다.

실제로 이행된 것은 거의 없었다. 사회당 소속 주택부 장관 이사벨 로드리게스는 그 자신이 다주택 보유 임대인이다.

스페인에서 주거 문제는 2007~2014년 거대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해 경제가 파탄 난 이래 줄곧 중대한 정치 사안이었다.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면서 스페인의 경제 성장과 고용은 비대해진 건설 부문에 크게 의존하게 됐다. 2000년대에 스페인에서는 영국·독일·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주택이 지어졌다.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 공급이 크게 늘다가 2007년에 거품이 터졌다.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건설이 중단됐으며, 경기가 추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했다.

2008~2015년 사이 약 50만 건의 강제 퇴거가 벌어졌다. "잔인한 역설은 집이 수십만 채나 남아돌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는 것이다." (하비에르 모레노 사카레스, '15년 후', 《뉴레프트 리뷰》)

정부는 빈집을 대거 사들였다. 그러나 그 빈집을 공공 주택으로 전환하지 않고 투자 펀드에 헐값으로 팔아넘겼다. 대형 임대업자들에게 감세 혜택도 제공했다.

스페인의 역대 정부들은 중도 좌우파를 막론하고 긴축 정책을 폈다. 그러는 동안 은행가들은 거액의 성과급을 챙겼다.

2011년에는 '인디그나도스'(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분출해 마드리드 도심의 광장을 점거했다. 광장 점거는 장기간 거듭된 시위로 이어져 2014년 수도 마드리드 폭동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2014년 창당한 좌파 정당 포데모스는 그 운동의 활력과 불만을 바탕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포데모스의 전략은 선거와 자본주의 국가 기구를 이용해 변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뒀다. 포데모스 창당 지도자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2016년에 이렇게 말했다. "제도권이 아닌 거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극좌 시절 우리가 하던 허튼소리는 거짓말이다."

2019년 포데모스는 사회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한때 포데모스가 밀어내겠다고 하던 기성 정당의 집권을 떠받치게 된 것이다.

그 연립 정부는 노동계급을 저버리고 쓰라린 환멸을 자아냈다.

급진적인 청년 세입자 운동가들과 노동조합 활동가 다수가 의회 정치에 희망을 걸었다가 실망을 맛봤다. 그들은 11월 29일 총선에 별로 기대가 없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광범한 분노에 밀려 스페인의 양대 노총인 노동총연맹(UGT)과 노동자위원회(CCOO)가 총파업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투적인 전술을 채택했다. 많은 주거권 운동 단체들이 이제 지역위원회를 건설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해, 극우 정당 복스에 맞서 투쟁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스페인 총파업은 새로운 저항 물결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출처 Judy Cox in Barcelona, 'Where next after huge general strike in the Spanish state?' (2026. 11. 13)
번역 김준효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이란 전쟁과 한국의 참전 문제
인공지능(AI) - 희망, 거품 혹은 재앙?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7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홍대역 젠더폭력 피해자들 기자회견

마포구청의 거짓말과 2차 가해에 항의하다

11월 16일 마포구청 앞에서 홍대입구역 젠더폭력 피해 여성들이 마포구청의 거짓말과 2차 가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선 자리였다. 동료와 가족, 연대 시민들이 40명 가까이 참가해 곁을 지켰다. 최헌국 생명평화교회 목사도 참가해 피해자들에게 연대했다.

피해자와 연대자들은 젠더폭력 가해 직원의 직무 배제와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10월 28일 홍대역에서 거구의 마포구청 소속 남성 청소 직원이 집회 신고가 된 행사장(매주 열리는 신문 홍보 부스)에 난입해 장대로 여성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여성들만 겨냥한 젠더폭력이자 도구를 사용한 특수폭행이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안전한 공간에서 벌어진 여성 대상 특수폭행 사건"(피해자 변호사)이었다. 그는 사건 2주 전에도 같은 장소에 나타나 같은 여성에게 시비를 건 바 있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민원을 넣었지만 마포구청은 처리 기한(11월 5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문의하자 마포구청 측은 가해 직원을 "멀찍이 배치"해서 "마주칠 일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11월 11일, 사건 발생 2주 만에 가해자가 폭행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났고, 또 다른 여성 참가자를 향해 위협을 가했다. 그 여성 참가자의 증언에 따르면, 다시 나타난 가해자는 "반말과 욕설로 난동을 피우며 바닥에 벌렁 드러눕기도 하고, 마구 뛰어다니며 모자를 집어 던지고, 주변 시민들에게 억울하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듯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사진 이마진

"멀찍이 배치했다"는 거짓말 홍대역 젠더폭력 피해자와 연대자들이 마포구청의 거짓말과 2차가해를 규탄했다

이후 〈에브리뉴스〉의 취재 결과, 피해자들이 마포구청에게 들은 것과 달리, 마포구청은 가해 직원을 "홍대 내 다른 지역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가해자는 사건 장소 바로 옆에 있던 초소를 계속 이용하고 있었다.

마포구청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 직장에 피해를 알리고 고소 등의 조처를 취했을 때 가해자가 보복 공격을 행하는 일이 흔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젠더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 조치다.

당연히도 피해자들은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박소정, 가명).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현장에 갔다면 다시 그 가해 직원을 마주칠 수도 있었고, 2차 가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마포구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행정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납니다."(임초롱, 가명)

"피해 여성들은 마포구청장에게 편지도 쓰고 민원도 넣고 방문까지 해, 가해 직원을 직무 배제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마포구 일대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마포구청은 완전히 피해자를 우롱한 것입니다."(김지영, 가명)

강수정 씨(가명)는 이렇게 규탄했다. "마포구청은 젠더 폭력 사건에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일관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거짓말을 하고, 보복 공격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이자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자인 최수빈 씨(가명)는 "가해 직원이 마포구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한 피해 여성들은 마포구 일대를 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일 뿐 아니라, "가해 직원이 대시민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다른 여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홍대역 폭력 사건은 특히 여성들의 표현의 자유에 가해진 젠더폭력이었다. 가해자는 여성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신문 홍보 활동에 "팔레스타인 거짓 선동하지 마라"며 폭력을 휘둘렀다.

연대 발언에 나선 최헌국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11일에 가해자를 맞닥뜨린 여성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예외적이고 유별난 사건이 아닙니다. 비슷한 일은 다른 여성들에게도 일어나 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아직 몸과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깨 관절와순 파열과 피멍, 근육통에 시달리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강수정 씨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억울하고 울분이 솟구친다"고 말했다. 임초롱 씨는 그날 이후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만 봐도 흠칫 놀라고, 자주 가던 홍대입구는 물론 마포구 전체를 약속 장소로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느 피해자들이 겪는 것처럼, 홍대

▶ 7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홍대역젠더폭력피해자들

2주 만에 다시 나타난 가해자 마포구청은 2차가해를 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극우의 학내 행사를 막아내다

사오리 인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2025년 인하대학교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극우 학생 단체(인하정신)와 김문수 지지 단체(파파미)가 인하대에서 행사를 열려 했으나, 광범한 항의에 부딪혀 인하대 밖으로 밀려났다. 통쾌한 일이다.

'극우에 반대하는 인하대 사람들'이 발의한 연서명에 총 898명(최종 집계)이 동참했다. 1984년에 인하대에서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린 당시 철학과 학생들의 동문회를 비롯해, 인하대 총학생회동문회, 진보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진보대학생넷 인하대지회 등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항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인하대 당국은 김문수와 극우 인사들을 초청한 '청년 리더십 워크숍' 강연과 이승만 동상 복원위원회 출범식의 교내 개최를 모두 불허해야 했다. 그 강연으로 인하대에서 세력을 조직하고 운동을 띄우려 했던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606호 '극우 세력의 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 추진·김문수 초청 강연 반대한다')

'극우에 반대하는 인하대 사람들'은 이런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도 극우의 준동에 맞서자는 결의를 모으는 집회를 11월 14일(토) 오전 11시 인하대학교 후문(가장 번화한 문이다) 앞에서 열었다.

이 집회는 그 자체로도 극우의 준동에 맞서는 의미도 있었다. 오전 11시



사진 오수민

신속한 행동, 통쾌한 승리였다!

40분에 인하대 후문 밖에서 '인하정신'이 '이승만 동상 복원위원회 출범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하대 후문 앞은 오전 11시가 되기 전부터 극우에 반대하는 인하대 구성원들과 그들과 연대하는 인천 지역 단체 활동가들로 북적였다. 참가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고무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제목을 힘차게 함께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극우는 인하대에 발 붙이지 못한다!" "학살자·독재자 이승만 동상 복원 시도 반대한다!"

연서명 결과 보고(졸업생 정건 씨) 발언에 이어, 재학생, 졸업생, 연대 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발언자들은 제주 학살, 보도연맹 학살, 3.15 부정선거 등 이승만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극우의 이승만 복권 시도를 규탄했다. 인하대 철학과동문회 함형조 회장, 최규진 의과대학 교수, 정의당 인천시당 권순욱 사무처장, 진보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최재봉 위원장 등이 발언했다.

재학생 선다윗 씨는 연서명 발의자들과 광범한 연대 덕에 극우 집회를 내몰 수 있었다고 감사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선 씨는 그럼에도 극우에 맞서는 것은 "단 한 차례의 전투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지난한 전쟁이 될 것 같다"며 연대 지속을 호소했다.

재학생 이예빈 씨도 발언에서 "민주주의는 침묵 속에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계속 외쳐야 합니다."

극우에 맞선 집회가 기세 좋게 이어지자 주변에서 집회를 지켜보던 학생들과 시민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기도 했다.

맞은편에서 우익들은 인하대 점퍼를 입은 젊은 남성 서너 명을 앞세우고 이승만 동상 복원위원회 출범식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승만을 존경한다" "건국전쟁 옳았다" 하고 떠들며 자기들 연설을 이어 갔다.

'인하정신' 단체 대표 정대교는 "이승만을 이야기하면 극우입니까" 하며 본색을 가리려 들었지만, 극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의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부아가 치민 우익 유튜버들은 "윤 어게인!" "빨갱이는 북으로!" 등을 외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극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기세에서 밀리자 투덜대며 물러나야 했다.

김문수가 마이크를 잡자, '극우에 반대하는 인하대 사람들' 측 집회 사회를 맡은 최하란 졸업생은 재빨리 구호를 선창했다. "김문수 환영하지 않는다, 꺼져라!" "김문수와 극우는 인하대에서 꺼져라!" 참가자들은 "꺼져라"를 연호했다.

김문수의 발언에 찬물을 끼얹은 후 참가자들은 집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성공적인 행동에 고무된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대화의 자리를 갖고 이번의 성과를 이어 갈 방안을 논의했다.

▶ 6면에서 이어짐

역 피해자들도 폭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섰지만 거듭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폭행을 입증하려면 상해진단서가 필요한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수십 만 원의 비용 앞에서 망설여야 했다. 구청에 낸 민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처리 기한이 연장됐다.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자세한 설명 없이 "멀찍이 배치"했다는 거짓말이었다. 성평등가족부를 찾아갔지만, 별 다른 도움을 얻지 못하고 서울시 감사과에 다시 민원을 넣으라는 조언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날의 폭력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다. 김지영 씨는 "이것이 여성들을 뺑뺑이 돌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연대자들에게 감사하며 더 큰 지지를 호소하고 꿋꿋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항의서한과 요구안을 마포구청 비서실에 전달했고, 18일 고소인 진술을 앞두고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 목소리도 넓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과 '팔레스타인 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팔연교),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네트워크'(팔대넷)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하다가 폭행당한 여성들에게 연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응원 메시지와 지지금을 보내 주는 사람들도 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마포구청 홍보팀은 16일 〈노동자 연대〉와의 통화에서 가해자를 "홍대 쪽 권역에서 배제해서 [마포구의] 다른 지역"으로 배치했고, "[대민 업무가 아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인지는 알려 주기 어렵다고 했고, 무슨 업무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강수정 씨는 "이미 마포구청이 거짓말을 여러 번 해서 신뢰하기 어렵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피해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명백한 시민 폭행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마포구청은 가해 직원을 업무 조정이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현

12월 5일 팔연사 주최 방한 강연을 앞두고

팔레스타인 연대자에게 추천하는 일란 파페의 명저들



김동욱 《벼랑 끝의 이스라엘》(근간) 역자

일란 파페 방한 강연이 12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 종각역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다(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이 주최하는 이 강연에서 일란 파페는 "가자가 뒤흔든 세계: 이스라엘의 인종청소 프로젝트와 그 위기"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일란 파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하이파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이스라엘 건국 과정의 팔레스타인인 인종청소를 기록·연구했고, 관련 활동에도 참가했다. 이 때문에 살해 협박 등 박해를 받고 이스라엘을 떠나야 했다. 현재 영국 엑서터대학교 명예교수다.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파페의 명저들을 소개한다.(축약되지 않은 소개 전체를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



(유강은 옮김, 교유서가, 2024)

《팔레스타인 비극사》(열린책들, 2017)를 교유서가가 새 제목으로 다시 냈다. 1947~1949년 사이 400여 개 마을이 파괴되고 75만 명가량의 팔레스타인인이 고향에서 쫓겨났다. 이스라엘의 공식 역사는 사람들이 전쟁통에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설명하지만, 파페는 이스라엘군 문서와 생존자 증언 등을 근거로 이것이 벤구리온과 그 측근들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인종청소'**였음을 밝혀낸다.

이 책은 인종청소가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따라간다. 마을별 정보를 모은 '마을 파일' 등 사전 준비에서 시작해, 1947년 유엔 분할안 이후 벤구리온의 측근 모임인 '협의체'가 이듬해 3월 '플랜 달렛'이라는 청사진을 완성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어 5월의 탄투라 학살, 6~9월의 인종청소 작전 확대, 이듬해 1월까지의 '최종 청소'와 (이스라엘로의) 난민 귀국 금지 조치가 차례로 나온다.

후반부에서는 폐허가 된 마을 위에 휴양 공원이 들어선 '나크바의 기억 학살', 귀환권 문제, 오늘날의 '요새 이스라엘' 등을 다룬다.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 《이스라엘에 대한 열 가지 신화》 저자

시온주의에 맞서 온 유대인 역사학자 일란 파페 방한 강연

가자가 뒤흔든 세계

이스라엘의 인종청소 프로젝트와 그 위기



일시 12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종각역 교원챌린지홀

- 한국어, 영어, 아랍어 통역 제공 - 참가비: 20,000원 (학생/난민 15,000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문의 010-2846-1948 | palestine-solidarity.or.kr

《팔레스타인 현대사: 하나의 땅, 두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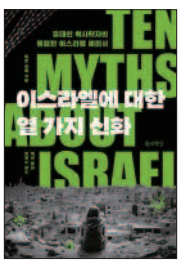
(유강은 옮김, 후마니타스, 2009)

오스만 제국 말기부터 오늘날까지를 '하나의 땅' 팔레스타인의 역사로 다룬 책이다. 시온주의의 태동과 유대인 이주, 영국의 위임통치,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추방, 1967년 이후의 점령, 오슬로 협정과 두 국가 해법의 실패, 분리 장벽하에서의 삶까지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의 특징은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정치사가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간 보통 사람들을 서술의 중심에 둔다는 점이다. 출간 당시 〈주간경향〉은 이 책을 "양쪽 민족주의를 넘어서 계급적 관점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파헤치는 역사서"라고 평했다.

파페는 서문에서 자신은 "식민자가 아니라 피식민자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썼다고, 분명한 '당파성'을 숨김없이 밝힌다. 지금은 절판됐지만 여러 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열 가지 신화》



(백선 옮김, 틈새책방, 2024)

'팔레스타인은 빈 땅이었다' 같은 과거의 신화 여섯 가지,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 국가다' 등 현재의 신화 세 가지, 그리고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길'이라는 미래의 신화 한 가지를 차례로 해체한다.

1967년 전쟁이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쟁이었는지 등을 하나씩 따지고,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인종차별 국가,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이며 두 국가 해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파페는 서문에서 이 책은 "균형 잡힌 책"이 아니며, 억압받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편에서 권력의 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로서 쓰였다고 밝힌다. 장마다 신화 하나씩을 다루는 구성이라, 시온주의와 이스라엘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따라가기 쉽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아주 짧은 역사》



(유강은 옮김, 교유서가, 2025)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2023년 10월 7일이 아니라, 1882년 첫 시온주의 정착민이 오스만령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때 시작됐다고 말한다.

이 책은 시온주의자들의 대규모 토지 매입과 그에 따른 주민 축출이 충돌을 불러온 과정, 밸푸어 선언과 영국의 위임통치, 1947년 유엔 분할안과 나크바, 두 차례의 인티파다와 오슬로 협정을 거쳐 21세기까지를 큰 줄기로 훑는다.

시온주의를 정착민-식민 운동으로, 팔레스타인 민족운동을 반식민주의 투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 일관된다. 분량이 짧아 파페를 처음 읽는 독자에게 추천할 만한 입문서다.

▶ 9면으로 이어짐

인터뷰 | 20여 년 만에 파업 나서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산재 접수는 2배가 됐지만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이 11월 26일 하루 파업에 나선다. 전체 조합원이 움직이는 것은 20여 년 만이다. 공단 내 7개 노조가 처음으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꾸렸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4.93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12일에 이어 17일에도 조합원 절반가량이 경고 파업을 하고 국회 앞에 모였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인력과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한다. 공투본에서 가장 큰 노조인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노조의 하종문 부산본부장에게 투쟁에 나선 이유를 들었다.

하종문 본부장은 2002년 근로복지공단노조 파업을 직접 겪었다. 2003년에는 이용석 열사 투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두 달가량 파업했다. 그 뒤로 전체 조합원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출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엄청난 초과 세수에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홀대하는 정부에 항의하다

“쌓이고 쌓인 것이 폭발했다”

“아주 오랫동안 쌓여 온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일 만큼 쌓여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 제도가 후퇴했고, 2010년 이후 총액인건비 통제가 강화되면서 임금 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2007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전국에 설치할 때 정부는 인력 71명을 늘려 주면서 인건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 71명의 임금을 기존 노동자들이 나눠서 감당했고, 그것이 해마다 누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노동자 복지를 확대한다며 신규 사업을 만들면서도 [공단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부담은 기존 노동자들이 다 떠안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업무는 더욱 폭증했다. “2020년 약 11만 건이던 산재 접수가 지난해 22만 건으로 2배가 됐는데, 반영된 인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고용·산재보험을 확대하면서 혜택받는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은 전혀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24개가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관련 있다. 그러나 공단이 요구한 2027년 예산 증액분 370억 원 중 정부가 반영한 것은 17억 원뿐이다.

임금은 다른 사회보험 공단보다 훨씬 낮다. “4대 보험 공단이니 비슷할 줄 알고 들어오는데, 같은 직급·호봉에서 국민연금공단보다 약 15퍼센트, 건강보험공단보다 약 20퍼센트 적습니다. 시험도 업무도 비슷한데 우리 공단에 머물 이유가 없죠. 인력을 채용해도 뽑으면 떠나고, 또 새로 뽑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신규 입사자의 5분의 1 이상이 공단을 떠났다.

비정규직의 처지는 더 열악하다. 하 본부장은 “콜센터·공무직 노동자들은 5년, 10년, 15년을 일해도 근속과 숙련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했다.

산재병원은 의료 장비의 90퍼센트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겼는데도 정부가 교체 요구를 외면해 왔다.

7개 노조가 처음으로 뭉치다

이번 투쟁에는 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산재병원 노조, 공무직·콜센터 노조 등 상급단체가 서로 다른 7개 노조가 함께한다.

“임금 협상이 결렬된 날, 여러 노조들이 모였을 때 공투본을 구성해 제대로 싸워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수노조가 된 뒤 공투본으로 뭉친 것은 처음입니다. 6~7월부터 전국에서 조직화를 해 와서 현장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 본부장은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친노동을 주장했고, 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 기관사 출신이고, 공단의 이사장은 수십 년간 노동운동을 했던 전태일재단 이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60조 원 넘는 초과 세수를 걷고도, 추상적인 미래대응 기금에 수백조 원을 넣으려 하면서 돌봄, 대중교통, 우리처럼 노동자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번 투쟁은 이재명 정부가 과연 친노동자 정부인지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하루 파업을 하고 6,000~7,000명이 국회 앞에 모일 예정이다. 12월 1일에는 산재병원 노조가 하루 파업을 벌인다. 하 본부장은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12월 초가 분수령”이라며 “그때까지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투쟁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 연대〉 독자들에게 파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은 말로만 하던 ‘노동 존중’의 본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 현 정부의 본질과 우리 노동자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투쟁에 나서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이 지치지 않고 힘내서 싸울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선영

▶ 8면에서 이어짐

《불타는 세상 속 팔레스타인》

(캐서린 나타넬·일란 파페 엮음, 백소하 옮김, 두번째테제, 2026)



파페가 캐서린 나타넬과 함께 엮고 대담에 나선 책으로, 올해 6월에 출간됐다. 무스타파 바르구티, 주디스 버틀러, 노엄 촘스키 등 11명과 나눈 대화를 묶었다.

상당수 대담이 2023년 10월 7일 이전인 2021~2022년에 진행됐지만,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식민주의에 맞선 세계 곳곳의 투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짚는 책이다.

《벼랑 끝의 이스라엘》 (김동욱 옮김, 교유서가, 근간)

파페의 가장 최근 저작으로, 필자가 한국어로 옮겼다. 일란 파페 방한 강연 즈음에 출간될 예정이다. 2022년 극우 정부 출범과 2023년 10월 7일, 가자 전쟁을 거치며 이스라엘 사회의 균열이 위험할 정도로 커졌고, 이것이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파페는 붕괴의 징후로 종교적·세속적 유대인 사이의 분열, 새로운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등장 등 일곱 가지 균열을 지목한다. 이어 나아갈 길로 팔레스타인 민족운동을 위한 새로운 전략 구축,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 실현 등 여덟 가지 소혁명을 제안하고, 2048년까지의 가상 일기로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이 함께 사는 탈식민화된 민주 국가를 상상해 본다.

자본가 걱정해 주는 국힘의 긴축 압박

김인식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그 재원이다.

국민의힘은 채권 시장의 공포를 내세워 긴축을 압박한다.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여유자금과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최소 50퍼센트는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 국힘 의원 박수영 등은 초과세수 국채 우선 상환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도 미래대응기금에서 12조 5,000억 원을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려고 한다. 국제 채권 시장의 요구를 중시하는 데서는 국힘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국가 재정을 통해 산업의 기술적·물리적 재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다("전략적 투자 플랫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창출된 잉여가치를 생산수단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국힘은 초과세수를 빚 갚는 데 우선 사용하지 않으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시중 금리가 인상되는 등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한다.

국힘은 향후 AI 거품이 가라앉고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내다보고 미리부터 긴축을 압박하는 듯하다. 실제 경제 위기가 닥치면 극우가 주도하는 국힘이 총선·대선에서 더한층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위험성이 있다.

AI 거품

그러나 긴축은 투쟁을 자극하기도 한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국가 부채 비율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복지 삭감과 임금 억제 등 노동계급을 공격해 온 유럽의 중도 정부들은 현재 거대한 반란에 직면해 심대한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 극우 정당들은 중도 정부들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등 서민의 불만과 분노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있다(그러나 모순되게도 극우 정당 자신도 재정 규율을 강조한다).

2026년 한국 국가채무 총액은 1,400조 원이 넘는다. 국내총생산(GDP)의 50퍼센트가량이다. 연간 이자 비용만 36조 원이다. 아직은 프랑스(약 5,000조 원으로 GDP의 119퍼센트)나 미국(약 5경 3,000조 원으로 GDP의 125퍼센트)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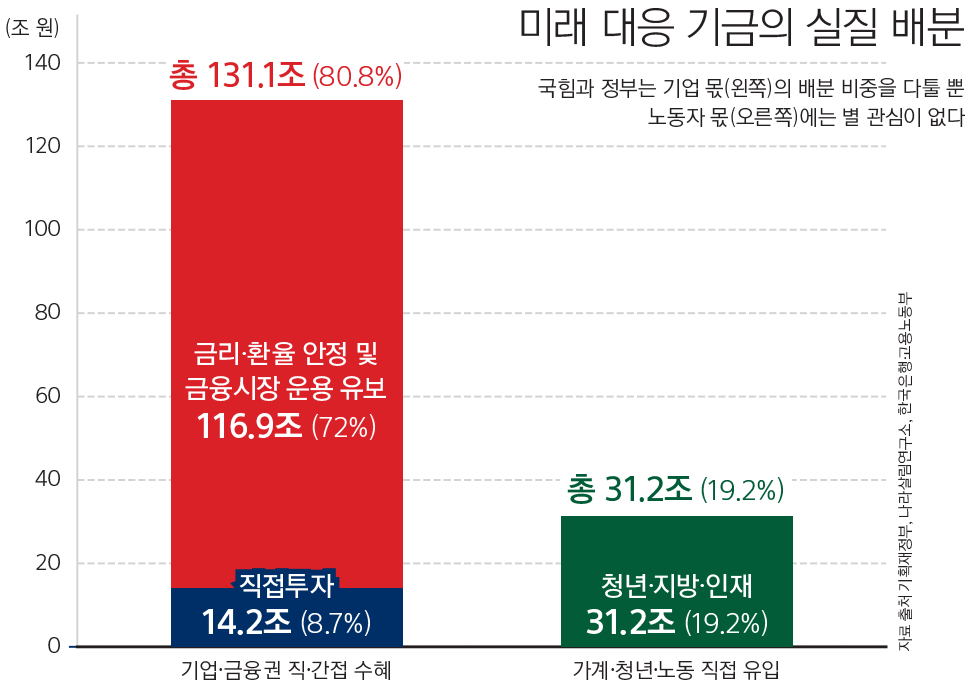
그러나 이 부채는 사람들에게 마구 뿌려져서 늘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끝없는 군비 지출, 전쟁, 파산 위기에 처한 자본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결과다.

국힘은 정부 예산안을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한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계급에게 양보하지 말라는 압박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올해 예산안의 핵심은 결코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기업 투자를 떠받치는 것이다.(본지 606호에 실린 '이재명의 예산안, 누구의 미래를 위해 돈을 쓰나'를 보시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동계급에 돌아가는 몫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채권 시장의 공포를 부각하고 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은 복지를 삭감하거나 공공부문 임금을 삭감하거나 국민보건서비스와 교육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한다.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에 항의해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가령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관련 기사). 따라서 국힘의 국채 우선 상환 주장은 물가 상승의 부담을 자본이나 국가가 아닌 노동자에게 떠넘겨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결국 채권 시장 문제는 긴축을 위한 알리바이이고 진정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즉, 국채 우선 상환 주장은 국가의 부를 채권 시장과 노동계급 중 누구에게 더 분배할 것인가 하는 계급적 문제와 관련 있다.



채권 시장은 무엇인가?

채권 시장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창구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보다 지출해야 할 예산이 더 많을 때, 부족한 자금을 바로 이 채권 시장에서 대출받는다.

채권은 차용증이다. 예컨대 정부는 빌린 돈을 10년 뒤에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발행한다. 이 기간에 정부는 이자를 지급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채권은 미국 10년물 국채다. 10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고, 매년 5퍼센트의 이자를 받는다.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은행, 보험사, 연기금, 다른 정부 그리고 점점 그 비중이 늘고 있는 헤지펀드 등 채권 시장 투기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향력은 채권을 매수할지 여부다.

빌 클린턴의 선거 캠프 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환생이라는 게 있다면 미국 대통령이나 교황, 아니면 최고의 야구 타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채권 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채권 시장이 되면 모든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

채권 가격의 등락은 매우 중요하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시중 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주는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이나 더 열악한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더 힘든 일을 더 빨리 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 부채와 채권 시장 문제는 노동계급에게 중요한 문제다.

채권 시장은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고 정부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선출된 좌파 정부가 국가 부도(채무 불이행)를 막으려고 애초의 진보적 공약을 포기하고, 채권 시장의 압력에 밀려 긴축 정책(재정 지출 삭감, 금리 인상, 민영화 등)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경험이 그랬다. 시리자는 국제 채권단이 강요한 가혹한 긴축을 끝내겠다고 공약해 2015년 1월 총선에서 승리했다. 시리자 정부가 출범하자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다. 결정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유동성 지원의 한도를 동결해 그리스 금융 시스템의 숨통을 조였다.

시리자 정부는 취임 6개월 만에 채권단의 긴축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했고, 61퍼센트가 반대했다. 그러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 일주일 뒤에 국민투표에서 거부했던 것보다 더 가혹한 긴축안에 서명했다.

이것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진정한 권력은 선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구체적 사례다. 권력은 선출된 직위에 있지 않고, 금융 기관, 기업 이사회, 장성·판사·경찰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관료에 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니다. 프랑스 등 유럽의 반란은 파업, 시위 등을 통해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은행가들과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맞서고 있다.

혐오의 전선 넓히는 극우, '사회적 합의' 뒤로 숨는 정부

'트랜스 마치'가 성대히 치러지기를 바란다

성지현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트랜스젠더 단체와 연대 단체들이 이날을 기려 왔다.

2016년 홍대 숲길 공원에서 100여 명이 촛불을 들고 시작했는데, 이후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모여 추모하고 행진하는 행사로 성장해 왔다. (관련 기사: 본지186호, '11월 20일 한국에서 처음 열린 '2016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그리고 10년이 되는 올해, 주최 측은 이 날을 '트랜스 마치(Trans March)'로 기념할 예정이다(11월 21일, 서울 보신각). '트랜스 마치'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연대자들의 행진을 일컫는 이름"이다.

오늘날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의 첨병은 극우 세력이다. '트랜스 마치' 주최측은 "특별히 지난 몇 년은 전 세계적으로 반젠더 운동이 힘을 얻고 혐오가 심각해지는 시기"라며 더 크고 너른 연대를 호소했다.

한국 극우는 지금 반이재명과 반중을 중심적 의제로 삼고 있지만, 또한 조직된 반젠더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개신교 우파를 기반으로 한 세력은 매년 대규모 퀴어퍼레이드 반대 집회와 기도회 등을 열며 지지 세력을 결집·동원해 왔다. 또다른 축은 에펨코리아(펨코) 사이트 등에서 공정·역차별 담론을 유포하며 반젠더 운동(외국인 혐오와 함께)을 벌여 왔다.

반(反)젠더 극우

이런 의제들은 기층의 극우 선동가들과도 접점을 늘릴 뿐 아니라 상층으로도 향하고 있다. 올해 1월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조배숙·한기호·주진우는 보수 개신교 단체가 국회 안에서 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전환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등을 내세운 집회에 참가했다.

국가기구 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젠더 극우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가 수장으로 있으면서 반젠더 투쟁을 수행했다.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의 퀴어퍼레이드 참여를 중단시켰고, 동성애·성전환 혐오 발언을 해 온 변호사가 책임자인 로펌에 인권위의 공식적인 차별금지법 연구를 맡겼다. 변희수재단의 설립 허가도 지연시켰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극우파 조전혁 등이 성소수자 혐오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전혁의 1호 공약은 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개최 금지였다.

그런데 윤석열의 극우적 쿠데타 미수로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이런 극우에 맞선 방파제 구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시민들이 꼽은 1순위 개혁 입법이었는데, 이재명은 "사회적 합의"(사실상 개신교 보수파와의 타협을 의미하는 말) 운운하며 대선 공약에 포함하지조차 않았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국회에 떠넘겼다.

그런데 여당도 나설 의사가 전혀 없다. 이달 11일에 와서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을 발의했지만, 당론은커녕 발의에 참가한 민주당 의원은 겨우 4명뿐이었다.

최근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발표 보류는 시사적이다. 교육부는 초안에 있던 동성애 비하 표현, 트랜스젠더 성별 정체성 부정 행위 금지 내용을 삭제했다. 삭제 이유로 시도교육청의 "민원"을 들었다.

교육운동 단체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등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의 항의에 교육부는 난처해 하며 재검토를 약속했다.



사진 이미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하자

그러나 결국 좌우의 압력 사이에서 눈치보던 교육부는 가이드북 발표를 아예 보류했다. 중도 정부가 개혁을 포기한 사례로, 실제 실천은 우파에 타협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쿠데타 기도를 저지한 대중투쟁 덕분에 집권했지만,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보다 국가기구와 정치 안정을 우선하며 우파와 타협해 왔다. 이런 행보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데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외면과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오른쪽과의 타협은 반젠더 보수파와 극우를 고무한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고 기성 정치의 배신으로 사람들의 삶이 악화되는 속에서 극우는 사람들의 분노를 약자에게 돌리며 세를 키우고 있다. 반중, 반이민, 반페미니즘, 성소수자 혐오는 서로 얽혀 기층과 상층을 오가며 자란다.

이런 일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미국, 영국, 러시아, 브라질 등지에서 극우는 상층과 기층에서 모두 "젠더 이데올로기"를 격렬하게 반대하며,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극우에 맞서는 일과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옥죄는 차별

트랜스젠더들은 성별로 나뉜 공중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고, 신분증을 내밀 때 차별받을까 봐 병원에 가기를 포기하기도 한다.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일상이다.

최근 1년 동안 수입 활동을 한 트랜스 남성·여성 응답자 218명 가운데 172명(78.9퍼센트)이 직장에서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고 답했다.

법적 성별 정정도 쉽지 않다.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처음 허용한 지 올해로 20년이다. 그런데 법적 성별 정정은 20년째 법률 하나 없이 대법원 판례와 예규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재판부마다 성별 정정 판단이 제각각이고, 특히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받지 못한 트랜스젠더들은 허가가 날지, 언제 날지도 모른 채 법원을 전전한다.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겪는 이토록 심각한 차별에 이재명 정부는 관심 한 번 기울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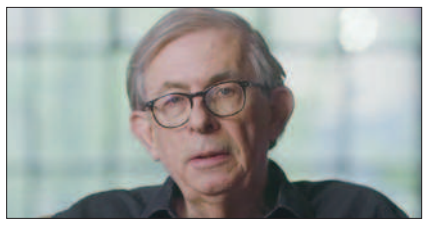
노동자 연대 ws.or.kr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ws.or.kr/subs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젠슨 황 추문의 이면에 있는 제국주의 경쟁과 트럼프 정부 내 쟁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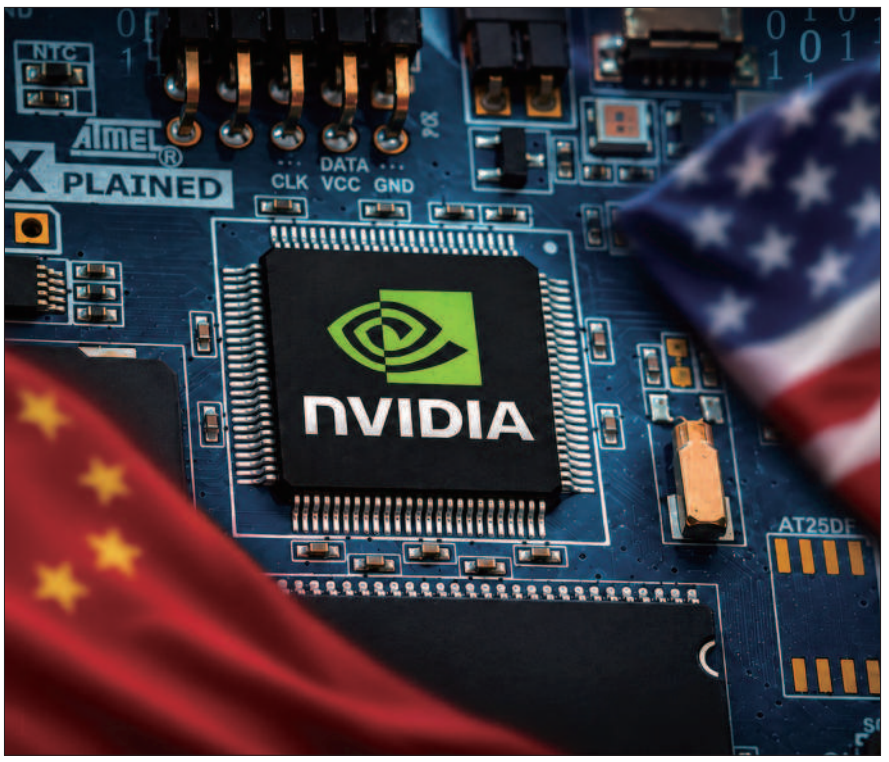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거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 젠슨 황의 해임을 둘러싼 추문의 진정한 맥락은 엔비디아가 AI 붐에서 하는 중심적 구실과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의 교차점에 있다.

황의 몰락을 계기로 그의 독재적 경영 방식, 가족 밀어주기,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행태들은 거대 기술 기업들에서 늘상 있을 법한 일이다. 온라인 언론인 브라이언 필립스는 "실리콘밸리가 신격화된 CEO들에게 의존한다"고 지적한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오픈AI의 샘 올트먼,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그런 사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이 공동 창업한 엔비디아다. 대부분의 주요 AI 기업들은 미래 수익성을 근거로 막대한 돈을 빌려 쓰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 낸 붐이 투기 거품이기도 한 이유다.



젠슨 황 추문은 대중국 경쟁 방식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 내 이견을 반영한다

순환 금융

엔비디아는 다르다. 엔비디아는 컴퓨터 게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출발했다. 그 GPU들이 AI에 맞게 개량돼 쓰이면서 엔비디아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JP모건은 지적한다. 엔비디아의 최근 매출총이익률은 73퍼센트다. 추문이 터지기 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조 5,000억 달러로, 막강한 애플에 버금간다.

엔비디아는 이런 이윤 덕분에 〈이코노미스트〉의 표현대로 "AI의 중앙은행"이 됐다. 황은 미로처럼 복잡한 금융 구조를 구축해 엔비디아의 공급 업체들의 자금 조달을 돕고, 막대한 정보를 집어삼키는 AI 프로그램들에 정보를 공급하는 데이터센터를 앞다퉈 지으려 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도우려 했다. 이 "순환금융"은 2007~2008년 주택 거품이 터질 때 파국을 낳은 편법들을 떠올리게 한다. JP모건에 따르면 이런 금융 구조하에서 엔비디아의 부채가 2026년 상반기에만 2,140억 달러에서 5,300억 달러로 늘었다.

한편, 다른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자체 GPU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는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수요가 중요해진 것이다. JP모건에 따르면 그 수요는 공개 가중치 모델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집중돼 있다. 공개 가중치 모델은 외부인도 모델을 운영하거나 개량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 모델이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이 AI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금수 조처 탓이다. JP모건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AI 연산의 32퍼센트를 주로 동남아시아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수행하는데, 이것은 아마 이런 금수 조처를 우회하려는 것일 테다.

젠슨 황과의 혼외 관계 의혹이 제기된 중국인 여성 앨리스 황은 메가스피드의 임원이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메가스피드는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알리바바와 연계가 있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으로 들여보내는 통로 구실을 한 듯하다. 젠슨 황은 반도체 금수 조처의 열띤 반대자였고, 그 조처를 폐지하려고 적극 로비했다.

트럼프

황은 트럼프의 관심을 얻어 냈다. 황은 억만장자들이 으레 그러듯 뇌물을 건넸다. 예컨대 백악관에 거대한 무도회장을 짓는 데 2,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트럼프는 해임된 황을 동정했고 지난주에는 황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설득하려고도 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대통령은 황을 현대판 헨리 포드로 보고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그가 선도하는 기술이 이 시대에 결정적 중요성을 띠고" 미국의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 내에는 황의 강력한 적들도 있다. '대중국 강경파'에 속하는 황의 적들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비교적 유화적인 접근을 황이 부추긴 것에 반감을 품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앨리스 황이 중국 국가안전부 공작원인지를 아직까지 확인한 바 없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중국 강경파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앨리스 황에 관한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를 자기 잇속에 맞게 이용했다. 루비오는 현재 트럼프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부통령 J D 밴스와 경쟁하고 있다. 루비오는 "CIA의 보고를 더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보고서를 다시 썼다고 한다. 그리고 루비오의 버전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젠슨 황을 몰락시킨 일련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중국 강경파는 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타격을 입은 트럼프 정부 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공개적으로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러트닉이 금수 조처를 충분히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비난한 것이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AI 거품이 빠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 속도가 더디지만 말이다.

번역 이원웅